

#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참관기

The Public Hearing for Revitalization of Common Duct Installation

## I 공청회 개요

- 일 시 : '08. 5. 23 (금) 15시~18시
-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회의실
- 주 최 : 국회의원 김재경
- 주 관 : 한국시설안전공단
- 후 원 : 국회건설교통위원회, 국토해양부
- 참 석 : 강길부 국회의원 외 방청객 200인
- 일정표



글 | 安相魯  
(Ahn, Sang Ro)

토질 및 기초기술사, APEC엔지니어,  
공학박사,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부회장,  
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단장.  
E-mail : srahn@kistec.or.kr

14:00~15:00	등 록
15:00~15:15	개회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회사 : 국회의원 김재경</li> <li>- 격려사 : 국토해양부장관 정중환</li> <li>- 축 사 :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진철훈</li> </ul>
15:15~15:45	주제발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 : 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실장 김훈</li> <li>■ 발표 : 국내 공동구 설치 활성화 방안 한국시설안전공단 연구단장 안상로</li> </ul>
15:45~17:00	토 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좌장 : 이태식 한양대학교 건설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(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기지역연합회 회장)</li> <li>■ 패널 : 김정희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보팀장 안내형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장 이병철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 권영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안전위원장 장경덕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김일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유오식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철영 주식회사 동호 부회장 (이상 무순)</li> </ul>
17:00~17:30	질의응답



공청회 전경

## II. 주제 발표

국내 공동구 설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안상로 단장이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추진배경

- 지하매설물 공사로 반복되는 도로굴착
  - 예산낭비 신고의 40%가 도로굴착 관련(기획예산처, '05.11~'06.3)
  - 도로굴착 공사의 94%가 지하매설물 교체·보수



한국시설안전공단 안상로 단장의 주제발표

구분	지하매설물 교체·보수	도로 유지보수 공사
시행주체	한전, KT, 지자체 등	지자체
비율	94%	6%

※ 24개 지자체 샘플조사 결과('05년도), 자료 : 국무회의 보고자료, 2006. 12

○ 공동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

구분	전 체	지 자 체	사업시행자
중요 도시 시설	6위	4위	15위
공급 부족 시설	4위	1위	18위

※ 26개 공공시설(도로, 학교, 공원 등)의 공급 관련 설문 결과

※ 자료 :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연구(건설교통부, 2000)

○ 공동구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('06. 12 행정부 · 건교부 · 기예처 공동)

- 일정규모 이상 개발 시 공동구 설치 의무화 필요
  - 도로 굴착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각종 사회적 비용 예방
  -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 강구
  - 공동구 설치 지역규모, 효율적 관리 방안, 비용부담 원칙 등

○ 공동구 설치 및 안전대책 지적(국회 건설교통위원회)

-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(국회, '07.7)
- 공동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정부 정의(국정감사, '07.11)
- 공동구 안전관리대책(화재, 침수 등) 질의(한국시설안전공단 답변, '08.1)

2. 추진경위

○ 공동구 활성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(기획예산처, '06.5)

- 의무화 대상 범위의 한정
-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 추진 필요
- 비용 분담, 효율적 관리 운영 방안 검토 필요

○ 공동구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(건설교통부, '07.1)

- 관련기관 간 협의, 조정 및 활성화 추진(관계부처, 점용기관 등 17인)

○ 공동구 활성화 방안 연구 시행(건설교통부, '07.2 '08.6)

- 구체적 추진방안 및 법률(안) 등 활성화 방안 마련

○ 관련기관 실무 협의(건설교통부, '07.11)

- 기획예산처, 지자체, 점용기관(한전, KT 등)
- 공동구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국가의 비용보조 요청



패널토론

### 3. 현황 및 문제점

#### ○ 재정적 문제점

- 초기 설치비용 높음
  - 공동구는 개별매설 비용과 비교하여 초기비용이 높음
  - 설치비용만을 단순 비교 시 약 2배 이상(4개 수용시설 기준)
  -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은 공동구가 우수(1.2~2.4배)
    - 개별매설 비용 초과분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필요

#### ○ 기술적 문제점

- 통합 수용에 따른 피해확산 우려
  - 화재, 누수 발생 시 타 수용시설에 피해 발생 우려
  - '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이후, 안전시스템 강화
  - 최근 공동구 내 안전사고 미 발생 → 선진화된 재난방지 기법 및 체계적 유지관리시스템 구축

#### ○ 제도적 문제점

- 법적·제도적 기반 미흡
  -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
  - 일본, 대만 등 개별법 제정·운영 → 법적·제도적 기반 마련
- 의무화 지구의 미 규정
  - 관련기관 협의 여부에 따라 설치 검토
  - 행정력 낭비 및 개발사업 지연 초래 →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의무화 규정 필요
- 한정된 수용시설
  - 제한된 수용시설 참여로 초기투자비 부담
  - 설치방법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 미흡 → 수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의무화 규정 필요

### 4. 공동구 설치 활성화 방안

#### (1) 수용시설의 범위

- 필수수용시설 : 전기, 통신, 상수도, 냉난방
- 임의수용시설 : 중수도, 쓰레기수송관 등 필수수용시설을 제외한 수용시설

#### (2) 의무화 범위

- 국내 설치사례, 공동구 활성화 및 정책적 효과 등 고려,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지구
- 단, 설치 효과가 낮은 개발 사업지구는 의무화대상에서 제외

#### (3) 비용분담

- 점용예정자, 사업시행자, 지자체 및 국가 비용 분담

## 5. 결론

- "낭비성 보도 블록 교체 및 잦은 도로 굴착공사"가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
- 경제성 평가 결과 장기적 측면에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
-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나, 관련 지원 제도 부재로 설치 미비
- 공동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 지구에 대한 의무화 및 국가·지자체의 비용 보조 등에 대한 제도화 마련이 필요

## III 토론 주요 내용

- (김일태) 공동구 설치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  
 제도 정비 : 국토계획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
- (이철영) 설치 의무화 및 수용 가능한 시설은 모두 수용 필요  
 설치규모 : 중규모(100만m<sup>2</sup>) 이상 의무화시 설치효과 발휘
- (김숙철) 공동구 설치 필요성은 동감, 수요에 맞게 공동구 규모를 다양하게 결정하고 계획단계에서 사전 수용기관 협의 필요, 주간선도로 일부가 아닌 전체노선에 대한 계획 필요
- (유오식)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필요, 수용시설 및 비용부담 규정 후 단계적 보완 발전 필요
- (장경덕) 점용예정자의 비용부담 과도시 비용보조 필요, 관련기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 설립 필요
- (권영진)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구 설치 지침, 조례 등 필요, 공동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기술검토 필요
- (김정희) 공동구 효과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필요, 기존시가지에도 공동구 설치계획 수립 검토 필요
- (안내형)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공동구 설치에는 공감, 비용부담원칙은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, 일률적 보조가 아닌 지구특성을 고려한 보조율 적용 필요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- 연구 내용에 공청회시 제시된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'08년 하반기 중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예정
  - 국토계획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(의원입법)

(원고 접수일 2008년 7월 10일)